



[암호화폐] 비트코인 두달 새 2배 급등 불황에 가상화폐 들쭉 03



Economy

코스피	2079.01 (-29.03)	코스닥	708.80 (-13.82)
금리 (미국 3년)	1.72 (0.00)	환율 (원-달러)	1187.50 (+10.50) (13일)

복지부, '대형병원 신속대응시스템' 시작부터 파열음

응급상황 발생 저조한데... 운영비만 과다지출

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 등 참여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시작 병원, 정부사업에 '울며겨자먹기' 의료장비 무상공급 요구 행태도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분류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1군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	4종(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2군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	
3군	주5일 이상, 8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2인 이상	2종(비디오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일반병동 환자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일반병동 입원 환자들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빠지는 일은 드문 반면, 종합병원이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피해는 애먼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빅5 포함 대형병원 참여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부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 등이 참여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참여 가능한 93개 병원 중 56%에 해당하는 53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부터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일반병실은 중환자실과 달리 환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조치다.

대상 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며,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구비 현황 따라 총 3군으로

분류했다. 1군은 시스템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1인과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군은 주 5일, 16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전담 간호사 5인 이상을 배치하면 된다. 3군은 주 5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전담간호사 2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2,3군의 경우 신속 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구비 장비에도 차이가 있다. 3군의 경우 비디오 후두경, 간이 진단 검사기계를 갖춰야 하며 1군과 2군의 경우, 이외에 이동식 인공호흡기와 초음파를 포함한 4종을 갖춰야 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까지다.

◆의료기기 업체 '갑질' 피해

참여 병원들은 불만이 많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환자들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횟수는 몇 차례 되지 않는 반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대부분의 병원은 운영시간과 인력 부담이 가장 적은 3군을 선택했지만, 손해 보는

장사인 것은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1군 환자 1명 당 1260원, 2군은 610원을 책정했다. 3군 수가는 310원에 불과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병동 입원 환자에 긴급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한 해 10건도 채 되지 않는데 병원은 장비와 인력, 운영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며 "대형병원들은 손해가 뻔한데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갑질의 피해는 애먼 의료장비 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를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호가하는 의료장비 비용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이다.

의료기기 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필수 구비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장비 대여는 일반적으로 의료장비 안에 들어가는 진단용 소모품을 몇 백개 이상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해 몇 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한다면 사실상 무상공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VR로 보는 면접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구직자 및 학생들이 VR면접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국내 식품업계 노심초사

당정·업계, 유입 차단에 만전

업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국내 식품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미국, 유럽으로 번지거나, 국내로 유입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이다. 발병 후 10일 이내에 죽음에 이르며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도살처분 외에 방법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졌다. 중국은 발병 이후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살처분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올랐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3000원대를 유지하던 kg당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kg당 4523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대형마트에서 100g당 1725원 하던 삼겹살 가격은 5월 10일기준 100g 당 1880원으로 올랐다.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산과 수입산 둘다를 사용해 육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식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육가공품 기피 성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국과 유럽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다면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되고, 이에 원재료에서 국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스팸 등 국내외 돈육을 사용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돼지고기 가격 인상요인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인상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당정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 유입방지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등지에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법정관리 기업, 자금지원해 회생속도 높인다

금융위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워크아웃·기업회생 제도 보완

〈기업구조조정 제도〉

금융위원회

항목	채무재조정	장점	단점
자율협약	제1금융권만 해당	은행권 신규자금지원가능 수수 및 RG골 부담	2금융권 및 사채권자 채무조정 불가
워크아웃	1,2금융권 모두 해당	채무제공 금융권 전반 책임분담 가능	사채권자 채무 및 시중은행 책임회피 가능
법정관리	상거래 및 모든 채무	모든 채무 조정 가능	신규자금 지원 불가, 수수 및 RG골 부담 큼
P-Plan	상거래 및 모든 채무	모든 채무 조정 가능 +신규자금 지원 가능	수수 및 RG골 부담 큼

앞으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회생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법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자금투자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기업의 크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은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보전처분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업회생은 경영권 박탈과 함께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을 논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워크아웃시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야 기업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처럼 재산보전처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